

환경영향평가 원리 및 실무

02.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I)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우리나라는 1977년 12월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사전협의)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조성, 에너지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의 근거를 최초로 마련, 사전협의 형식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1990년 환경부의 승격과 함께 환경관련 법령의 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우리나라 평가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주민의견 수렴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사전 조정함으로써 개발과정의 합리성을 제고 하였고, 지역단위의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지방환경관서로 위임하는 등 현실성 있는 검토가 가능토록 하였다. 그 이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상당한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이르고 있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의 영향력이 각 부처에 파급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제도(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등)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었다. 그 결과 절차의 중복과 비용의 과다 지출로 사업자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제도개혁 차원에서 각종 영향평가의 통합을 추진하여 1999년 12월 31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부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영향평가 협의를 과거 개별법과 같이 소관부처가 담당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 결과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항목과의 중복, 사업자의 이중부담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교통·재해·인구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스코핑 절차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2008년 3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기존 운영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등의 환경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단계별 주요내용

단계별	주요내용
제도의 도입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77. 12 환경보전법 제정시 최초도입 -「사전협의」라는 표제하에 도시개발, 산업입지조성, 에너지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최초 마련 ○ ' 79. 12 환경보전법 개정시 대상사업을 3개 분야에서 6개 분야로 확대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라는 표제하에 공업항, 도로건설, 수자원개발등 3개분야 추가 ※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못하여 실시하지는 못함
제도의 시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81. 8 환경보전법 개정시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사업 포함, 대상사업 확대 -철도, 공항, 매립 및 개간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등 4개 분야 추가 ○ ' 81.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 ' 82년부터 본격시행 ○ ' 86. 12 환경보전법 개정시 민간부문 개발사업 추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가하여 11개 분야 33개 단위사업으로 확대
제도의 발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91. 2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폭보완 강화 -대상사업 15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확대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체육시설, 산지개발, 특정지역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5개 분야 추가(중전 아파트개발은 도시개발에 포함) -평가서 초안 및 주민의견 수렴제도 도입 -평가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도입 ○ ' 92. 8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시 평가협의 업무 중 일부를 지방환경관리청으로 위임 -사업시행자가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 사업 -승인기관이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인 사업 -전원개발사업 중 송전선로, 옥외변전소 건설사업 ○ ' 93. 6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으로 평가제도 개선 및 보완 -환경영향이 큰 국방, 군사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추가하여 평가 대상사업을 16개분야 59개 단위사업으로 확대 -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중 설명회개최 의무화 및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 도입 -사업승인기관이 환경부에 협의토록 하여 협의내용을 사업승인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협의없이 사전공사 또는 협의내용 미이행시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협의내용 이행관리 강화 ○ ' 93. 3. 7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검토의 전문성과 협의기준 준수방안 확보 -대상사업을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으로 확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징수 방안 마련 -전문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립 -평가서 허위작성자 처벌조항 신설,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지정, 관리대장 미작성시 과태료 처분조항 신설
제도의 통합 및 조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99. 12. 3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를 통합 -환경영향평가 작성비용 현실화를 위해 분리발주제도 도입 -사업자 신청주의로 하여 평가항목·범위확정제도(Scoping) 도입 -사전환경성검토와 연계 강화(의견수렴 대체등 활용)

단계별	주요내용
제도의 통합 및 조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08. 3. 28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 관련사항을 삭제 -스코핑절차 의무화 및 중점평가 내용 삭제 -평가항목에 온실가스 추가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 -주민의견 채수럼 조항 신설 및 대상 규정(30% 이상 증가 등) -평가서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한 간이평가제도 도입 ○ ' 12. 7. 22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령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체계성 및 효율성 제고 -환경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개발사업)로 구분, 평가체계별 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평가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되던 3개 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행정계획(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을 현행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 - 전문성을 갖춘 대행자가 전략환경평가서 작성대행을 하도록 하되, 대행업무 범위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차등화 -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부여, 평가서 작성을 총괄 관리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최초 도입 -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관리 방안, 허위·부실작성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벌칙규정 신설 및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사업자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됨) 규정 신설

2. 환경영향평가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2.1 환경영향평가법 체계

현행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제9장 76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당해 사업을 인·허가하는 승인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할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각 장별 주요내용과 법령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장 총 칙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재수렴, 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검토, 협의내용 통보, 협의내용의 이행,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3장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재수렴, 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검토, 협의내용 통보, 협의내용 반영, 조정요청, 재협의, 변경협의, 사전공사의 금지 등, 협의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착공 등의 통보, 협의내용 이행의무 승계,관리·감독, 조치명령, 재평가 등, 시도조례 환경영향평가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협의요청, 평가서 검토 및 통보, 협의내용의 반영, 사전공사의 금지, 사업착공 등의 통보,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감독
	제5장 환경영향평가 특례	개발·사업계획 통합 특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절차에 대한 특례,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제출
	제6장 환경영향평가 대행	환경영향평가 대행,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결격사유, 환경영향평가업자 준수사항,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준수사항,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소 등
	제8장 보 칙	평가서등의 공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등 관계전문기관 수행사항, 비밀엄수의 의무,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환경영향평가협회, 권한의 위임·위탁
	제9장 벌 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그림 1 환경영향평가법상 각 장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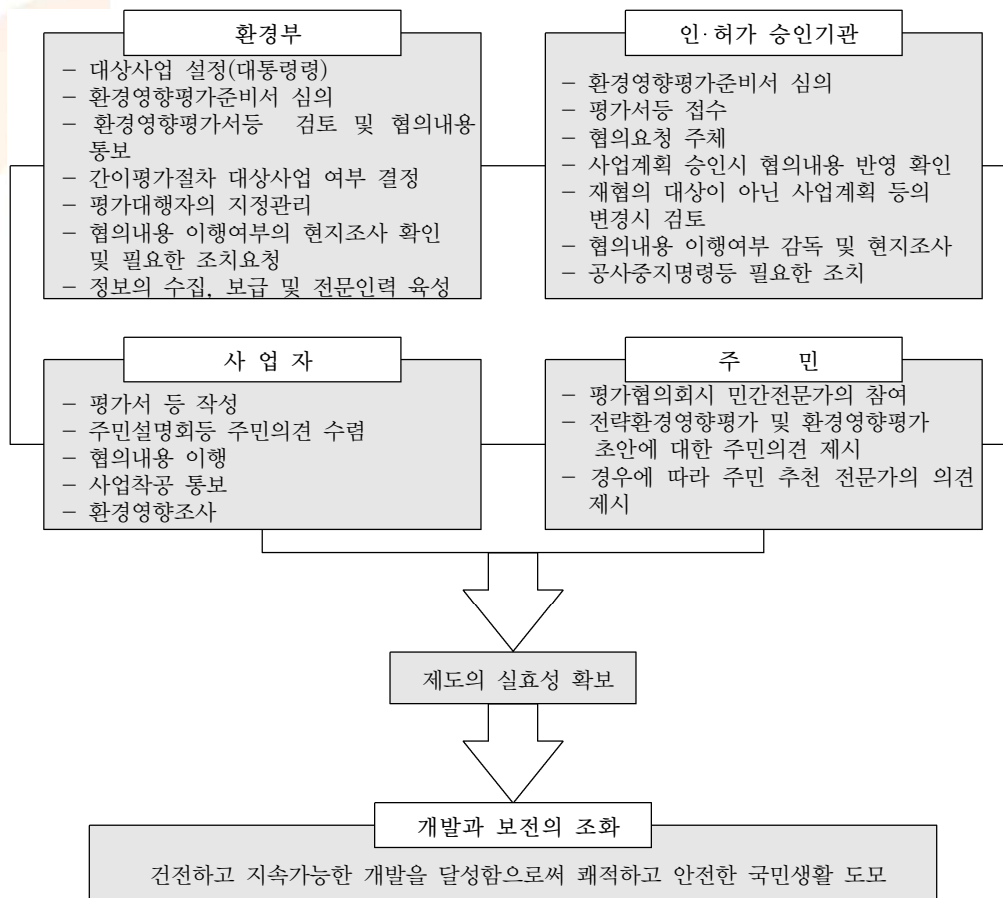


그림2 환경영향평가법 체계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모든 종류의 개발사업은 그 규모의 크기에 관계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실익이 없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의 특수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가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첫째, 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둘째,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셋째, 매립사업, 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변화 예측이 곤란한 사업
 넷째, 택지·공단조성 등 대기·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등 모두 17개 분야 76개 단위사업을 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표 2>와 같다. 이는 평가 대상사업을 미리 정하여 놓는 평가대상사업 열거(positive list)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미국 등이 채택하는 평가대상여부 사전심사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표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분야	세부사업 및 규모
가. 도시개발(1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대지조성, 택지개발·보급자리주택단지조성, 학교설치공사 : 30만^m² ○ 도시개발, 혁신도시개발, 역세권도시개발 : 25만^m² ○ 공동집배송센터조성, 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 물류터미널설치, 농어촌마을정비 : 20만^m² ○ 도시계획시설사업 : 운하, 유통업무설비(20만^m²), 주차장(20만^m²), 시장(15만^m²) ○ 공공·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10만^m³/일)
나. 산업입지(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개발, 중소기업단지개발, 자유무역지역지정, 공장설치, 공업용지조성, 산업기술단지조성, 연구개발특구의 조성 : 15만^m²
다. 에너지개발(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개발, 전기설비 : 발전소(1만kW, 댐 및 저수지 건설 수반시 3천kW,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 10만kW, 공장용지내 자가발전설비 3만kW), 지상송전선로(345kV 이상 및 10km), 옥외변전소(765kV), 회차리장(30만^m²), 저탄장(5만^m²) ○ 해저광업, 광업(30만^m²), 송유관시설 중 저유시설설치공사(10만kL), 석유 저유시설 설치공사·석유비축시설설치공사(10만kL), 가스저장시설(10만kL)
라. 항만건설(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항시설건설 : 외곽시설(300m, 매립 수반시 3만^m²), 계류시설(매립 3만^m²), 기타(15만^m², 매립 수반시 3만^m²) ○ 항만시설건설, 신항만시설건설사업 : 외곽시설(300m, 매립 수반시 3만^m²), 기능시설(매립 3만^m²), 기타(15만^m², 매립 수반시 3만^m²) ○ 항만준설사업(10만^m², 준설량 20만^m³), 항만재개발사업(30만^m²)
마. 도로건설(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4km, 도시지역 폭 25m)·확장(2차로 이상 및 10km)·신설 및 확장(신설길이/4km + 확장길이/10km ≥ 1)
바. 수자원개발(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하천시설(하구언설치공사), 저수자·보·유지조성 : 만수면적 200만^m², 저수용량 2,000만^m³
사. 철도건설(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설(고속포함), 도시철도건설 : 4km 또는 10만^m² ○ 삭도·궤도건설(삭도 : 2km, 궤도 : 4km 또는 10만^m²)

사업분야	세부사업 및 규모
아. 공항건설(1개)	○ 공항개발 : 비행장, 활주로(500m), 기타(20만 m^2)
자. 하천개발(1개)	○ 하천공사(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 10km
차. 개간·매립(2개)	○ 매립사업 : 30만 m^2 , 지정항만·신항만·자연환경보전지역내 3만 m^2 ○ 간척·개간사업 : 100만 m^2
카. 관광단지(6개)	○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온천개발 : 30만 m^2 ○ 공원집단시설지구(10만 m^2), 유원지설치(시설면적 10만 m^2), 도시공원(시설면적 10만 m^2)
타. 산지개발(2개)	○ 묘지·봉안설치(25만 m^2), 초지조성(30만 m^2), 산지전용(20만 m^2) ○ 임도설치사업 : 8km 이상·생태·자연도 I 등급 권역내 사업
파. 특정지역개발(10개)	○ 지역종합개발(20만 m^2), 주한미군시설, 국제화지구개발, 평택시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업도시개발, 신공항건설, 경제자유구역개발, 친수구역조성사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사업
하. 체육시설(5개)	○ 청소년수련시설설치사업, 청소년수련지구조성사업 : 30만 m^2 ○ 체육시설설치공사, 경정·경륜시설설치사업, 경마장설치사업 : 25만 m^2
거. 폐기물·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2개)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 매립시설(면적 30만 m^2 또는 용적 330만 m^3 , 지정폐기물의 경우 면적 5만 m^2 또는 용적 25만 m^3), 소각시설(100톤/일) ○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 100kL/일
너. 국방·군사시설(3개)	○ 군용항공기지내시행사업 : 비행장, 활주로(500m), 기타(20만 m^2) ○ 국방·군사시설사업(33만 m^2), 해군기지내시설사업(15만 m^2 , 매립 수반시 3만 m^2)
더. 토석 등 채취(7개)	○ 하천 및 연안구역에서의 토석 등 채취사업 : 상수원보호구역내 2만 m^2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5km 이내 5만 m^2 ○ 산지 토석 등 채취사업(10만 m^2), 해안광물채취(강원·경북 2만 m^2 , 기타 3만 m^2), 해안골재채취(25만 m^2 , 채취량 50만 m^3),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 25만 m^2 , 50만 m^3), 골재채취단지 지정, 채석단지 지정

2.3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선정이 환경영향평가의 검토와 협의를 위한 근거가 된다면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제일보라 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표 3>과 같이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분야 등의 6개 분야에서 총 21개 항목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의 선정과 동시에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을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시간낭비와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부담을 주게 되고 그 범위를 작게 잡으면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범위선정은 지역 환경현황, 각종 오염원의 발생량 및 성상, 발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각 평가항목별로 조사범위와 영향예측범위를 설정해 놓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해 놓고 있다.

표 3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항목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분야
1) 기 상 2) 대기질 3) 악 취 4) 온실가스	1) 수질 (지표·지하) 2) 수라·수문 3) 해양환경	1) 토지이용 2) 토양 3) 지형·지질	1) 동·식물상 2) 자연환경자산	1) 친환경적 자원 순환 2) 소음·진동 3) 위락·경관 4) 위생·공중보건 5) 전파장해 6) 일조장해	1) 인구 2) 주거 (이주 포함) 3) 산업

평가항목을 선정하는 일반적인 과정으로는 사업 유형별로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는 환경요소(대기오염원, 수질오염원, 소음·진동발생원, 폐기물발생량 등)와 환경영향을 받는 환경항목을 비교·분석하고 환경영향의 작용단계(부지조성단계, 시설공사단계, 시설운영단계 등)를 고려하여 환경영향 항목을 세분화한다. 이와 같이 세분화된 항목별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어느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평가의 범위, 주요 대안 및 문제점과 각 참여자의 역할 등을 사전에 관련자의 참여하에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인 scoping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획정제도”를 도입·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승인기관은 위원회 구성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나 시행에 소극적이고, 사업자는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등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

였다. 2008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대상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승인기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2012년 7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scoping 결과를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2.4 평가기준

평가는 장래 환경변화가 될 것으로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적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의 예측결과에 대한 평가시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일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가능한 한 주관적 사고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여 평가활동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특유의 지역특성이나 특수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에 대하여 왜곡한다거나 과소평가될 소지를 마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평가기준의 설정과 그 기준을 이용한 예측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일련의 작업은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NEPA 목적조항 및 제101조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수준의 달성, 자연자원의 질의 회복 내지 향상”등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평가기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목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 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토록 되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전, 사회·경제환경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는 현재의 환경기준,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 ③ 평가항목 중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등을 갖는 자연환경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가치를 갖는 것과 지역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 희소성·고유성·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아직 평가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환경요소나 환경현상에 대하여도 현재의 과학 및 기술수준에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보다 안전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 준용될 평가기준의 설정을 위하여 환경기준치, 환경목표치, 환경인자 및 환경현상에 관한 조사, 연구사례, 과거의 피해사례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실히 하여 평가기준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타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목표치
-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환경보전목표치
- 보전가치여부 및 보전목표치 설정여부
- 기존의 연구사례 및 과거 환경피해 사례
- 외국의 평가기준과 환경기준 사례 등

2.5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환경영향평가서(EIS :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환경관련 사항에 대하여 기본양식에 맞추어 문서화한 것으로 일종의 종합보고서 형식을 띄고 있다.

이와 같이 보고서의 형식을 띠게 된 것은 환경적으로 조사되고 예측평가분석된 환경관련 사항들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어떠한 분석기준과 분석결과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입안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의 일부분으로서 주된 대상인 사업계획의 수립내용에 부가되는 첨부 서류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설정을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와 해당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작성하게 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최종 환경영향평가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표 4>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 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 초안, 최종평가서의 작성체계

구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평가서 초안	최종평가서
작성 체계	1. 사업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3. 지역개황 4.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5.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6.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7. 약식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여부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결정내용 및 조치사항 6.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7.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총괄) 8.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9.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10. 대안설정 및 평가 11. 종합평가 및 결론 1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여부 13. 부록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결정내용 및 조치사항 6.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 7.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8.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총괄) 9.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10.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11. 대안설정 및 평가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여부 14. 부록
분량	<input type="checkbox"/> 본문 : 50면 이내 <input type="checkbox"/> 활자크기 12포인트	<input type="checkbox"/> 본문 : 100면 이내 <input type="checkbox"/> 전체 : 부록 포함 200면 이내	<input type="checkbox"/> 본문 : 300면 내외 <input type="checkbox"/> 부록 : 본문분량 1/2 이내
작성 방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12-112호)	좌동	좌동

3.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는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평가항목 및 범위, 평가대상지역, 주민의견수렴 여부,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결정하는 scoping 단계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를 수용하여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단계, 협의내용 통보 후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사후환경영향을 조사하는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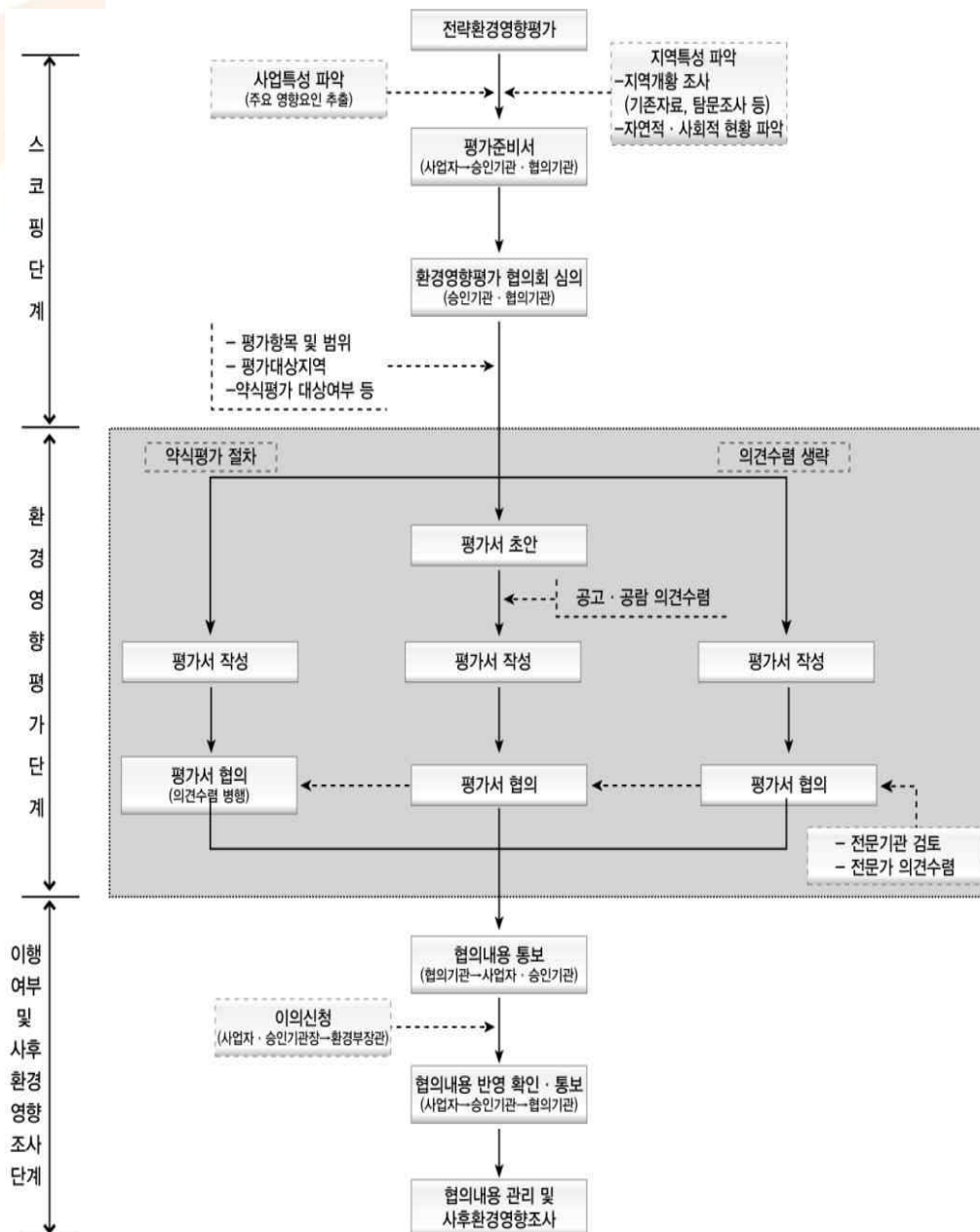


그림 3 환경영향평가 절차도